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이용한 가계대출 억제 방안

- **(정책 취지)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**
  -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부문의 자금가용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음
  - 또한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시중자금이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계속 유입되어 자산시장의 거품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
- **(정책 내용)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적게 배정**
  -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대출 배정시 차감 항목인 가계대출 반영 비율을 현행 60%에서 80%로 20%포인트 상향 조정
  - 중소기업 대출 비율(시중은행 45%, 지방은행 60%)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총액한도대출상의 제재를 대폭 강화
  -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미달하는 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차감 비율을 현행 미달금액의 50%에서 75%로 상향 조정
- **(시사점)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또다른 부작용 가능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임**
  - 최근의 가계대출이 부동산 담보를 매개로 이루어져 자산 가격 급락이 가계 파산과 금융기관 부실화등 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통화당국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됨
  - 하지만 설비투자와 수출이 아직 뚜렷한 회복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, 가계대출의 인위적인 억제는 가계의 유동성을 제약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던 소비 부문을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

정반석 연구위원 bsjoung@hri.co.kr ☎ 3669-4045

최근 주요 정책

유가 안정 및 수급 원활화 방안	산업자원부 (4.3)	- 국제유가 일일점검 체제 유지 - 고유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축유 방출 및 유가완충 자금 사용(현재 약 94일 사용분 비축중, 유가완충 자금 4,400억 원 예치중) -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석유수급조정 명령, 석유배급 조치, 판매가격 규제 등 실시
한국·사우디아라비아 투자보장협정 체결	외교통상부 (4.4)	- 주요 내용: 양국간 상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대국 투자에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 ·상대국 투자를 수용(收用)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 ·상대국 투자와 투자 수익의 자유 송금을 보장 ※ 2001년까지 한국의 對사우디 투자액 누계는 약 1억 달러, 사우디의 對한국 투자액 누계는 2.3억 달러로 아직은 양국의 직접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
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 작성	재정경제부 (4.4)	-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화 및 기업·금융의 거점화를 제시하고, 이에 필요한 물적·공간적 전략(H/W전략)과 제도·환경적 전략(S/W전략)의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 - 6월말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12월말까지 세미나,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
4월중 통화정책 방향	금융통화위원회 (4.4)	- 현상 인식: 소비 및 건설 활동의 호조세로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, 설비투자 및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므로 본격적인 경기 상승세로 보기 어려움 ·따라서 현 상태는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4월중 통화정책은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
한·중, 특허 관련 교류 및 협력 추진	특허청 (4.8)	- 양국 특허심사관이 공동으로 선행기술 조사·심사를 하는 「공동 심사 프로젝트」 추진 - 현재 발명의 우선권 주장을 위해, 양국 출원인이 상대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양국 특허청이 전자 매체에 의해 직접 교환 - WTO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(WIPO)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 지재권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 ※ 한국의 대 중국 특허 출원(2000년 기준)은 총 2,140건으로 '92년(한·중 수교)대비 10배 이상 증가